

국내·외 축산소식



수입조사료 '확보 대란'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수입조사료를 배정한 36곳의 시군 중 25곳이 이미 배정물량을 전부 소진해 추가 공급받거나 배정량의 90%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04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울산시는 9월까지 약 2807톤을 사용, 96.68%의 이용률을 보였고 남해군은 배정물량 506톤을 훨씬 초과한 635톤을 사용했으며 이천시는 배정량 220톤의 2.3배에 달하는 520톤을 농가들이 이용했다.

한우협회의 올 배정량은 1만7500톤으로 이 중 1만 3000톤을 각 시군에 배정했지만 9월까지 사용량은 시군배정량을 초과한 1만3231톤에 달해 부족현상이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다.

3만2500톤의 쿼터를 배정받은 낙농육우협회와 4만 2830톤의 서울우유조합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일열 서울우유조합 과장은 "다음달 중순경이면 쿼터물량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며 "현재 알팔파, 연맥짚 등 비쿼터물량이나 볏짚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엿친데 덩친 격으로 수입 조사료 가격은 최근 kg당 조사료 가격은 티모시 330~400원, 톨페스큐 240~250원, 라이그라스 240원으로 품목별로 봄보다 약 10% 정도 상승했다. 이처럼 조사료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우의 브랜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가들이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총채보리·총채며 생산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장비구입의 어려움과 계절적인 악재, 높은 물류비 등으로 생산은 물론 구매도 못하고 있다.

연중 한 번 공급하는 총채보리를 낙농가가 꾸준히 먹이려면 500kg~600kg짜리를 20~30개 정도 구매해야 하지만 이를 수용할 공간도 없고 물류비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입한 조사료를 낙농가가 구매하는 것과 전북 김제에서 조사료를 사오는 물류비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총채보리는 연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으니 농가들이 수입 조사료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의 한우농가는 "국산 건초가 수입 건초보다 질이 높지만 장비대금은 물론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사실상 수입 조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



연했다. 이에 휴경논과 밭을 재배지로 활용해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의 조사료정책이 다두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규모농가의 수입 조사료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


농림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장비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현 정책의 홍보강화 및 휴경지에 사료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올 57만톤 정도인 수입조사료쿼터량의 내년도 증감여부는 향후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벼 수확 전에 사료화에 필요한 비닐과 암모니아가스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 볏짚을 암모니아가스로 처리해 사료화하는 것으로 비육우의 체중 증가와 육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최고 275억원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합사료價 16일부터 5~6% 일제히 인상**

배합사료업체가 오는 16일부터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배합사료업체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국제곡물가 상승폭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평균 5~6%선에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물류비와 하역비 상승 등 적지 않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는 흡수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선에서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사료포대 25kg 너무 무거워”… 고령 축산농 사고발생 잦아**


소·닭·염소 등 가축사료 포장단위가 25kg으로만 제작·판매돼 고령농업인들이 사료를 운반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어 포장단위를 15kg·20kg 등 작은 단위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소를 700여마리 사육하는 황오운씨(60·광양시 진상면 비평리)는 “60세의 나이에도 사료포대를 하루에 20~30개 운반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어깨가 쭈시고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60~70대 고령농업인들은 농협에서 집 앞까지 배달해준 사료포대를 들지 못해 굴려서 운반하다 포대가 터져 사료를 길가에 쏟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급 농협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사료공장에도 민원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영희 전남 광양시 진상농협 조합장은 “비료포대 단위도 25kg에서 20kg로 10여년 전에 바뀌었다”며 “고령 가축 사육농가들의 애로가 많은 만큼 사료를 운반하기 쉽게 포장 단위를 소포장으로 다양화해야 한

 **전북도 볏짚 사료화사업 추진**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연말까지 25억원을 들여 14만5천t의 볏짚을 사료화하는 사업을



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쇠고기 미세 뺏조각 허용하라

- 미국,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 ...

농림부 "살코기 수입 원칙 충실"

9월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가 해제된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국내 수입 실적이 전무하자, 미국 측이 올 초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보낸 서한에서 우리 측이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할 때 어느 부분까지를 뺏조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는 미국 측이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수입위생조건에서 빼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 같은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올 초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령 미만의 빼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가 발견될 경우 제품을 폐기하고, 해당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도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미세한 뺏조각까지 쇠고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절단용 톱에 묻어나는 정도의 뺏조각은 한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우리 측 규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국내에 처음 도착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뺏조각 등 이물 포함 여부를 정밀검사토록 하고 있어, 현지 수출업체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국의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에 미세한 뺏조각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당초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 빼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돼지 규격·육질등급 따로 판정한다

- 등급판정소, 개정안 마련 양돈농가 개선 요구 수용

육량과 육질을 종합해 판정하고 있는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방법에 냉도체 등급판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 같은 내용의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농림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양돈농가 및 관련단체에서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소매 단계에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을 개선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등급판정소가 추진하고 있는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도체 등급판정 시 우선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에 의해 A·B·C·D 등 규격등급을 매기고, 여기에다 육색·조직감·지방색과 질·지방침착도·삼겹살 상태 등의 육질을 평가해 1·2·3등급으



로 구분하는 등 육질등급도 함께 판정토록 했다.

육질등급의 경우 1등급은 도체중량(박피 기준)이 67kg 이상이고 육색 및 지방침착도가 좋아야 한다. 2등급은 67kg 미만의 것으로 육색의 광택이 좋지 않고 삼겹살의 두께가 얇고 지방 피복상태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상이 된다. 3등급은 상품성이 극히 떨어지는 것에 한해 매겨지게 된다.

특히 냉도체 판정과 관련해서는 작업장과 가공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원복 등급판정소 소비홍보팀장은 “현행 돼지등급은 육량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정하고 있어 소매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육질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구분해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등급판정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매 단계에서 육질등급에 따른 거래가 정착돼 생산농가의 사양관리 개선이 이뤄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해지고, 특히 돼지 부분육 유통이 육질등급별로 이뤄져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민신문]



〈국정감사〉민간업체 수의사 축산물 검역 ‘웬말’

– 강기갑 민노당 의원 “공정성 담보 안돼” 비판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를 맡고 있는 관리수의사가 민간업체가 고용한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

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담당해야 할 관리수의사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검역시행장의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수입 축산물의 유치가 곧 창고 운영의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창고 운영자에게 고용된 관리수의사에게 수입 축산물의 검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27일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과정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용인지역에 있는 검역시행장 3곳을 시찰해 이 같은 허점이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역시행장의 직원이 수입업자(고객)가 수입한 축산물을 철저히 검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검역검사 제1의 원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관리수의사 제도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의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축산물은 모두 검역시행장으로 입고되며, 검역검사가 완결돼야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현재 전국 69개의 검역시행장에는 관리수의사가 1인씩 배치돼, 수입 축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관리와 수입 축산물 1%에 대한 현물검사(관능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농민신문]



국내에서 양돈장 신규 건립 요원 한가?

– 양돈협,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사신축 해결방법 모색



우리나라에서 양돈장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도 전쟁과 같은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에서 종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우리종돈장 김사장은 지난 2004년 충북 음성군에 비육돈 농장을 만들려고 총 29,800㎡ 부지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냈으며, 이와 함께 사전환경영향검토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양돈장이 광범위하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고갈시키며 생태축을 파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김사장은 대전고등법원에 최근 양돈장 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전고등법원 특별1부는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양돈장 예정부지가 마을 위쪽에 위치해 있어 악취와 함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농장주의 이익 보다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양돈장이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사설기관인 (주)넥스지오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음성군을 관할하는 원주 환경청에서도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양돈장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생태축을 파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우리종돈장측은 “부지 위치가 마을과 5백여미터 떨어져 있고 그나마 언덕을 넘어가 두개의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및 절개지 발생 대책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돈장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1심의 판결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평가와 관련, 오염가능성이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막연한 오염가능성만으로 부동의 평가를 내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해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양돈장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양돈장 신축은 물론 기존 양돈장도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지내 축사 신축 가능에서 그 해법을 찾고,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며, 냄새 및 지하수 고갈 등 객관적인 환경영양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돈협회는 양돈업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축분뇨의 경우 오염원이 아닌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원이라는 점 등도 지자체 등에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간 양돈자조금]



도축 수수료 현실화 등 건의

도축업계가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을 비롯한 업계대표 5명은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지역적 특성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축장이 밀집한 곳이 경기도이고, 이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도축장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도축업계 대표들은 경기도내 도축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이와 더불어 경영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명시돼 있듯이 도축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고한도액 규정마련 △올해 7월 경기도만 인정한 도축검사 수수료 환원 △도축장내 가공공장 지원 △경기도 ‘맞춤농정’ 정책지원에 도축장도 포함 △도축폐기물의 축분재활용 방안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덕영 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공급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은 만큼 도축장 제한 환경이 열악해서는 안 된다.

타도와 시·군의 상황을 분석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함을 밝히고, 도축수수료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도축업계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축세가 목적세로 전환돼 도축장 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을 비롯해 축산업 발전에 쓰여야 하는데 공감한다”며 동석한 조충희 축산과장에게 “세제관련부서와 협의해 해결토록 힘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추석연휴 이후에도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와의 면담이 내정돼 있는 등 도축업계 숙원사항을 풀어내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대화의 장을 가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상파울로, 구제역 발생으로 소고기 수출 타격

15일전 상파울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유럽연합(EU)은 상파울로 지역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상파울로, 빠라나, 마또그로소도술 주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들의 유럽 수출이 당분간 금지되었으며,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다른 주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들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측은 브라질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지조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다만 상파울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브라질 농축산업부는 지난 9월 8일 상파울로 외곽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 수의 대표단은 이미 상파울로 지역 농장들을 방문, 히오그란데도술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구제역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아직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차 상파울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브라질을 재 방문해서 좀더 다양한 정밀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과 브라질은 가축 보건 문제를 둘러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브라질 축산업이 유럽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응해서 유럽연합은 브라질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이유로 수입 제재를 가하고자 하고 있다. [프라임경제]